

■ 지금 여기 ■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

문 중 현

‘모두를 위한 결혼 법(mariage pour tous, 이하 동성결혼법)’ 이른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프랑스 우파진영의 시위가 거세다. FN을 비롯한 극우파 정당, 제 1야당인 UMP 그리고 전통적 카톨릭 세력의 시위가 2012년 8월부터 진행되어 오던 중 올해 6월 시앙스포 1학년 학생이며 극좌파 단체의 활동가인 클레망 메릭(Clement Méric, 19세)이 파리 베틀시장에서 스킨헤드들과 사소한 시비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청년의 사망 사건 이후 용의자인 스킨헤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혁명적 청년민족주의자(Jeunesses nationalistes révolutionnaires:JNR)의 대표인 알렉산드르 가브리악(Alexandre Gabriac)은 즉시 사건이 JNR과 무관함을 여론 앞에서 증명해야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JNR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만일 JNR이 불법화 된다고 할지라도 프랑스의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은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좌파들은 이 사건을 극우파들의 무책임한 반법률투쟁의 선동에서 비롯된 예견된 재앙으로 간주하면서 프랑스 극우파 운동의 맹동성, 폭력성을 비판하는 반면 우파들은 사건이 우발적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동성결혼법에 대한 반대 운동과는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논란의 중심인 새로운 결혼법은 1999년 동성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시민적 결합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동생활약정(PACS)제도가 만들어질 때 보다 더욱 강력한 우익 카톨릭 세력의 반감과 저항을

냥으면서 프랑스 사회를 정치적으로 동요시키고 있다. 2012년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즈음 프랑스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성결혼법에 대해 적대적인 우파들의 시위가 점점 더 거세고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였다. 동성결혼법 반대시위는 정부의 시위대 참여숫자에 대한 사진조작, 경찰의 과잉진압, 찬반 시위대간의 충돌, 동성애자혐오(homophobie)적 폭력의 증가, 법안의 찬반진영을 대표하는 사회적 인사에 대한 폭력 등 여러 선정적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을 거치면서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결국 UMP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의 일부 정치인들은 이 새로운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데 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사회당 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이번 법률안은 2012년 대선 중 공화국 대통령 후보였던 프랑스와 올랑드의 핵심공약임을 내세우면서 법률이 대선선거결과와 함께 국민의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맞섰다. 이번 ‘모두를 위한 결혼법’은 현재 법무장관인인 크리스띠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일명 토비라 법률로 불리운다. 그녀는 이번 법률을 ‘문명의 개혁(une réforme de civilisation)’이라 주장하면서 법률제정과 의회에서의 통과에 열정적 자세로 임해서 1975년 낙태의 합법화를 주도한 시몬느 베일(Simone Veil)에 비견되는 여성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동성결혼법 제정요구는 동성애 단체와 대선후보였던 세골렌 르와얄(Ségolène Royal),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노엘 마메르(Noël Mamère)등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던 가운데 2010년 일부 사회당과 녹색당 정치인들에 의해 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물론 일부 동성애자의 경우 결혼법률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통적 카톨릭 세력과 이성애자들을 자극하는 점을 우려하여 기존의 PACS제도를 개정, 보완하는 형태로 입양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국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자 동성결혼법은 2012년 11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이듬해인 4월 23일 의회를 통과여 마침내 2013년 5월 17일부터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안논의 즈음에 시작된 우파들의 시위와 사회적 논란은 법안의 공포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결혼제도를 이성부부가 아닌 동성부부에게 허용하는 문제, 이후 동성부부에게도 입양권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허용에 관한 생명윤리적, 법률적 문제이다. 예를 들면 법률제정 이전 2013년 2월 7일에 공개된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의 결정은 동성결혼에 대한 프랑스 사회에서의 논란 지형을 잘 드러내 준다. 최고행정재판소는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동성부부의 입양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족형태와는 다른 ‘법적간주(fiction juridique)’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모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문제 즉, 이성애자 부모에 입양된 아동과 동성부모에 입양된 아동이 스스로 부모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아동 사이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가족의 입양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최고행정재판소는 동성부모와 이성부모들간에 입양조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최종적으로는 제출하였다.

한편 작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거리에서는 법률에 반대하는 열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법안에 반대를 주도하는 핵심 단체인 모두를 위한 시위(La manif pour tous)는 새로운 결혼법이 남편, 부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남녀 모두의 성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사회적 친자관계’를 형성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결혼법은 생물학적인 성적차이에 기반해 있는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적차이를 성적 취향과 젠더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이며, 동성부부에게 허용되는 입양은 입양되는 아동에게 아빠와 엄마를 박탈하는 것으로 차별이자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프랑스에서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공수정(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PMA)과 대리모’에 대한 논란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성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어렵고도 긴 입양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동성부부들이 결국 입양이 아닌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가지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법 제정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수정과 대리모 허용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져서 생명윤리를 광범위하게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 방송인인 프리지드 바조(Frigide Barjot)가 대변인으로 있는 이 단체는 전통적 카톨릭 세력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일약 법률반대 운동의 전국적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극우 스킨헤드에서부터 FN, UMP내의 소수정치인 까지 포함하는 이 거대한 운동에 참여하는 정치세력과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밤하늘에 존재하는 별들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전통적인 카톨릭 복음주의 단체인 시비타스(Civitas, France Jeunesse Civitas 혹은 Institut Civitas)에서 스킨헤드 단체인 JNR까지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소수의 극우운동세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론장에 확실히 진입하였다. 새로운 반대자들의 모임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 시간 내에 파리의 거리를 점거할 수 있는 기습시위를 진행할 정도로 충분이 조직되었다. 더욱이 이번 시위에서 나타난 프랑스 카톨릭의 정치적 영향력은 30만여 명을 거리로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 프랑스 우파가 카톨릭세력과 전통적으로 거리를 두고 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 새로운 카톨릭 우파정당의 움직임이 예견되기도 할 정도이다. 토비라의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운동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on ne lâche rien)'라는 구호아래 어머니의 날인 5월 26일 파리에서는 경찰 추산 1만 5천(주최자 추산 3만 5천), 리옹에서는 9천(주최자 추산 2만), 등 프랑스 곳곳에서 반대운동 시위가 조직되었다. 반대운동의 지도자인 바조는 리옹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적 결함에 대해서는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냈지만 입양에 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른 반대운동의 지도자들 역시 반대운동이 현실정치와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극우파진영의 확산에 자신들의 운동이 전유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카톨릭 진영의 시위대들은 새로이

동성결혼법 반대 운동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시장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요구를 할 정도로 더욱 정치화된 요구를 선명히 드러냈다. 동시에 자신들을 폭력적 극우세력과 구분지으며 평화적 촛불시위의 형태로 다음 대선인 2017년까지 장기적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동성결혼법 반대운동의 흥미로운 점은 거리의 시위자들이 현재 프랑스에서의 시위를 아랍의 봄을 연상시키는 프랑스의 봄(printemps français)로 이름 붙이면서 자신들의 민주적 요구를 거부하는 올랑드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때로는 드골에 비유한 점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의 68년 5월 혁명에서 나타난 정치적 구호와 포스트를 적극적으로 전유하면서 비민주적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호소하였다. ‘올랑드는 우리의 피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우파 시위대들은 혁명에 대한 기억과 전통적 좌파정치문화의 기호들을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전통적 좌파와 공산당의 포스트를 전유하는 이러한 반-전복적 상징의 전유방식에 의해 5월 혁명의 해방을 위한 상징들이 배제를 위한 상징으로, 전통적,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전환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혼인신고제도는 대혁명 이후 시민간의 가족적 결합을 국가가 인증하는 하나의 제도로 등장하였다. 결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류의 전통이지만 이것이 국가에 의해 하나의 제도로 포섭되고 부부에게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기 시작한 것은 확실히 근대의 산물이다.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결혼제도 외부에 존재하던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의 동등한 권리,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결혼제도 내부로 자신들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동시에 국가의 통치영역이 입양과 인공수정등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가족형성과 재생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국가의 이러한 통치성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결혼법 반대운동을 통해 프랑스 좌우의 가치 대립이 아닌 생명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근대적 권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한양대학교, entendu@naver.com